

20% 벽 넘은 安, 文 따라잡고 민주 경선 이번 일으킬까

<회정> <재인>

조기대선 3대 관전 포인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이달 24일에 열겠다고 밝히면서 조기대선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각 당과 대선주자들도 현 대선구도를 신중하게 살피면서 대선판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선 언제 치러지나=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7~14일 이내 선고한다. 따라서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잡을 경우 3월3일부터 10일 사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박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기일을 3월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번수지만 현재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은 현재 선고(인용)가 확정된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에 따라 3월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4월29일부터 5월9일, 3월3일에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4월22일부터 5월2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진다. 따라서 가장 빠르게는 4월26일(3월3일 선고), 늦어도 5월3일(3월10일 선고)이 유력 후보군으로 좁혀진다. 다만, 5월3일은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5월2일 투표가 실시될 수도 있다.

현재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인 3월13일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선거일 규정의 마지막 수요일인 5월10일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민주후보 누가 되나=아권 대선주자들은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휴일인 19일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서울과 지방에서 활발한 현장 행보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몰입했고, 국민의당은 당원 배가를 통한 세 확산을 위해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서울에서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시각장애인용 책자 발간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에 나서는 등 소외 계층 보듬기 행보를 벌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탄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전 대표의 근거지인 부산과 김해를 방문해 문 전 대표의 안방 공략을 시도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서울에서 직장맘카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잡기' 행보를 벌였다.

이와함께 안희정 지사의 무서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남녀 10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3%로 지난 주보다 4%포인트 상승하며 1위를 지켰다.

안 지사의 지지율은 22%로 3%포인트 올라갔

현재 24일 최종변론 연기 안될 듯

선고일 따라 대선 날짜 유동적

안희정 지지율 2주만에 12%p↑

범여권 후보 단일화 여부도 관심



다. 안 지사는 2주 전인 2월 1~2일 조사 때 10%와 비교하면 무려 12%포인트가 상승했다. 한 달 전쯤인 지난달 10~12일 조사 때는 6%에 불과했다.

다만 민주당 내 지지도에서 안 지사가 극적인 계기를 만들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와 호남권 경선 결과 여부가 당 후보 선출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9%로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포인트 오른 9%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범여권 반격하나=자유한국당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속의원과 대선주자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장을 찾아가 하면, 지도부는 당의 '땃발'인 TK(대구·경북) 정거기에 나섰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이날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지역 핵심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급년 12월17일 대선을 하는 것이다"며 탄핵에 반대하는 "박근혜 동정" 표심을 자극했다.

'범보수 후보 단일화'와 '대연정'을 두고 한 차례 충돌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 지사가 대선후보 경선 룰을 두고 2라운드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일단 양측 모두 조식이 완비되지 않은 신생 정당의 한계를 고려할 때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거나 당원 투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데는 동의한 상태다. 양측은 이를 대신할 방법을 찾고자 전날까지 두 차례 '룰 미팅'을 했지만 선호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4野 “황 권한대행 특검 연장 조속히 수용해야” 원내대표 회동 5개항 합의

여야 정치권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야 4당은 1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하고 자유한국당도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또 2월 임시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납득할만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당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

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5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밝혔다. 바른정당이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우선 "특검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국당도 특검 연장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수사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국회는 특검법 연장안을 23일 통과시켜야 한다"며 "따라서 늦어도 21일까지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 4당의 이 같은 특검 연장을 요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은 정해진 시한 내에 특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중이어서 현재 결정 전에 특검이 수사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공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전제... 지방자치 헌법상 권리 명시

국민의당 소속 국회 개혁특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2020년부터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한 개헌안을 마련, 공개했다.

전정배·김동철·송기석·이태규·이상돈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정부형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의지와 내치를 분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이 갖는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가 갖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관련 권한만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사실상 국무위원

과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이들은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도 현직 국무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이들은 또한, "안전권·생명권·건강권·알권리·자기정보결정권을 신설하고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가 명시돼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투표자의 정당

별 지지율과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회위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의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부칙에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하고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으나, 당의 안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박지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헌안은 우리 당의 최종안이 아니지만 개헌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